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8년 11월

## “강한 농림수산물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한 7+1 전략 제시”

###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 심포지엄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식품 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4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과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6개 주요 농수산물식품산업 관련 기관이 11월 2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식품 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탈바꿈

오세익 원장은 최근 우리 농어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문을 열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를 모으는 심포지엄이 되길 당부했다. 장태평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농수산물식품산업을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생산자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며 연구개발(R&D) 등 기술지원을 품목중심으로 바꾸고, 농수산업은 식재료 산업, 가공산업과 연계하여 2·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통구

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2008년 호당 농가총소득은 1.1% 증가한 3,228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에 농업소득은 감소하나 농업의 소득이 증가해 3,583만원이 될 것이며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장단기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농업 R&D 실용화와 보급에 주력

이종기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R&D 전략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단기적으로는 개발된 기술의 보급 확산과 실용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을 통해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표 해양수산물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산부문 Upgrade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수산부문 장단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농업인이 바라는 농정과 농협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농협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농협은 더욱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노령농·영세농 복지정책 세워야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패러다임이 가격에서 가치로, 토지에서 사람과 기술로,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강한 농림수산물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체 육성, R&D 혁신 및 규제완화를, 수요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농업과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녹색성장과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전략을 주장하였으며, 배려차원에서 소외계층인 노령농·영세농에 대해 확실한 복지정책 추진 등 7+1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토론이 열려 농림수산물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정토론에는 남양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성패 부경대학교 교수,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현출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 저탄소 녹색성장 위해 농정체제 전반 재편 시급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방안’ 심포지엄에서 주장



제1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방안’이란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11월 11일 제1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연구원에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방안’이란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세익 원장은 개회식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와 시스템 구축, 녹색기술 연구개발 과제 등을 논의하여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 해법이 도출되길 당부했다.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 대사는 기초발제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태지역은 성장과 생태 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생태효율성을 기초로 한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과 추진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 전략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기반구축, 활용, 정착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창길 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농업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정 전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통해 저탄소정책과 통합·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허윤진 기획조정관은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기술개발을 지

원하고, 농식품산업을 저탄소,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 농어촌 공간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분야의 녹색성장 추진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박수철 연구정책과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농식품부 연구개발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자원의 농업적 이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대 전략과제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중혁 한경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윤재석 국민일보 논설위원, 이준호 서울대학교 교수,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최동근 환경농업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하였다.

### 멘토링 5기 결연식 가져

우리 연구원은 11월 3일 대회의실에서 제5기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신입직원 및 5명을 대상으로 결연식을 갖고 6개월간 활동에 들어갔다. 오세익 원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멘토링 결연식을 축하하고 향후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동호회 가을행사 열어

남시회는 11월 7일과 8일 충남 아산 신봉남시터에서 남회식을 가졌다. 배드민턴회는 11월 22일 도봉구 삼환구장에서 추계배드민턴 대회를 열고 새 회장에 박대식 연구위원, 총무에 전형진 부연구위원을 선출했다.

## 농업전망모형 신버전 KASMO 시연회 가져



11월 13일 연구원에서 농업전망모형 신버전 KASMO 시연회를 열었다.

11월 13일(목) 오후 4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오세익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농업전망모형 신버전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서는 모형의 구조와 운영 방법, 환율 변화 등의 영향 분석 등이 소개되었다.

KASMO(한국농업시뮬레이션모형;

Korean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라고 명명된 이 모형은 김명환 선임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한 모형팀이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농업전망과 정책실험에 이용되어 왔던 ASMO 모형은 퇴역하게 되었다.

KASMO 모형은 분석대상 품목을 대폭 늘렸고, 주요 품목들의 수입수요함수를 도입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또한 엑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품목담당자들의 정책실험이 용이하며, 총량부문과 품목부류별 하부모형의 분리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농업

권 오 복 연구위원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 금융부문과 실물경제의 침체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하강과 침체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11월 초 IMF는 3.9%로 잡았던 200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낮췄고 내년에도 미국, 유로지역,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탓으로 세계 경제는 2.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같은 전망치는 한달 전보다 0.8%포인트 낮은 것이다.

## 경제여건 변화, 농업에도 영향 불가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민간소비 위축 및 수출부진 등으로 2008년 국내경제는 4.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KDI를 비롯한 경제전망 기관들은 2009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 중후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OECD는 지난 6월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5.0%로 제시했으나, 최근 2.7%로 낮추었다. 또한 IMF는 11월 24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5%에서 1.5%포인트 낮아진 2.0%로 전망했다.

경제 위기 내지 침체의 영향에서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환율변화는 농산물 수출입 가격과 농자재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국내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역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농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환율은 원유 및 사료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한다.

주식가치 하락 등으로 개인의 소득과 자산가치가 감소하면 육류나 일부 과일

등 소득탄성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겸업소득은 물론 출타가족 보조와 같은 농업의 소득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2008년 농가소득 3,228만원 예상

상반기 고유가 및 국제곡물가 강세로 비료와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통계청은 2008년 3/4분기 농업용품의 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1.3%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비료비(전년 동기 대비 113% 상승), 사료비(50%), 영농광열비(44%), 영농자재비(30%)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기간 비료 가격이 40%, 영농광열비 33%, 사료비가 16% 증가하였다.

2008년 농업생산액은 곡물 생산 증가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가격 호조로 전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특히 쌀의 경우 생산이 9.9% 증가하고, 가격이 전년 대비 5.7% 높게 유지되어 생산액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농업중간투입재비(비료비+농약비+종자비+제재료비 등)는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생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7%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곡물의 부가가치는 쌀 생산액 증가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호당 농업소득은 경영비의 상승 등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업의 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하여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을 합한 2008년 농가소득은 전

년 대비 1% 증가한 3,228만원으로 추계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국내외 경제 여건이 농업에 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싶다. 금년 상반기까지 강세를 유지하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비료, 농기계, 사료 등과 같은 농업원자재 가격의 하락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여건이 불리할수록 농산물 수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제시되어 플러스 농업성장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 필요

최근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 농업에도 적지않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지만 위기의 이면에는 기회도 함께 존재한다.

최근 엔화 강세와 더불어 중국 멜라민 파동 등과 같은 식품 안전성 문제로 일본 바이어들의 국내 발길이 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길 원한다. 농산물 수출에 관한 한 고회율은 하나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농산물 시장의 외연 확대를 위해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료 및 연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형 시설원에 기술 개발·보급, 연료 소비량 절감을 위한 농기계 개발, 지역 내 사료증산, 폐기 식품의 사료 활용, 지역자원의 비료 활용 등 일본의 대책과 지구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FTA 협상, 자원확보와 미래 성장에 초점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미 FTA와 그를 둘러싼 문제였으나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전하는 뉴스가 신문과 TV에 넘쳐나면서 FTA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27개국과의 FTA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더욱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FTA 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때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FTA 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 FTA를 통해 자원 확보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거대경제권,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 자원부국 등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거대경제권 국가로 미국, EU, 일본 등과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도 우리나라의 주요 FTA 대상국이다. 인도와의 협상은 실질적인 타결을 거쳐 서명을 남겨둔 상태이고, 중국, 브라질 등과의 협상은 검토 단계에 있다. 자원부국으로 걸프협력회의의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협상도 추진 중이다.

인도와는 2006년 3월부터 열두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2008년 9월에 실질적인 타결을 보았다. 2009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서명과 비준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 중인 FTA 대상국은 EU,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ASEAN(잔여 협상부문인 투자

부문 협상) 등 5개 지역 45개국에 달한다. ASEAN과의 협상은 상품부문의 경우 이미 이행에 들어간 상태이고 투자부문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EU와의 협상은 2009년 초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핵심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캐나다와의 협상은 2005년 7월부터 1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자동차, 쇠고기, 돼지고기, 개성공단 문제 등 핵심쟁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로 조기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멕시코 FTA 협상은 2009년 초에 3차 협상이 예상되나 멕시코 업계의 부정적 시각때문에 조기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GCC와의 협상은 상호 민감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2009년 말까지는 타결될 전망이다.

## 페루, 호주, 뉴질랜드 주목

2009년도 FTA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국은 페루, 호주, 뉴질랜드이다. 일본 및 중국과의 FTA 협상은 개시 또는 재개 시점을 점치기 어렵다. 그러나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은 2009년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페루는 칠레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페루의 국내총생산(GDP)은 2,200억 달러로 칠레의 2,300억 달러와 비슷하며, 경제성장률은 2006년 8%, 2007년 9%에 달한다. 은(세계 1위), 아연과 주석(3위), 납(4위) 등 광물자원 생산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며,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풍부하다.


우리나라는 페루의 자원 및 경제성장 잠재력 이외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

루과이)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수입액 기준으로 93%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민감한 협상 이슈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호주와의 FTA를 위해 2007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 2008년 말까지 두 차례의 예비협약이 개최될 예정이며, 2009년 중반에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는 인구 2천만 명,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는 큰 시장으로 자동차, 휴대전화, TV 등 전자제품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풍부한 광물자원은 우리나라의 안정적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과 과일 등 원예작물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한 우려된다. 따라서 호주와의 FTA에서 어떻게 하면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고 우리의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호주와의 협상과 매우 유사하다. 뉴질랜드는 산림, 광물, 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하고 방축, 인력 이동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이 기대된다. 낙농과 원예 등 일부 농산물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민감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양허예외, 구제조치 도입 등의 안전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터키, MERCOSUR, 러시아 등과의 FTA도 추진되고 있다. MERCOSUR와는 공동연구를 마친 상태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 중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터키, 러시아 등과의 FTA는 공동연구를 거쳐 협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 EU, 정책 단순화와 검증으로 직접지불제 개선

김태곤 연구위원

유럽연합(EU)의 농정개혁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접근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새로운 정책개혁안을 만들었다. 농업보조금 감축을 비롯하여, 직불지불에 의한 고품질과 친환경 생산 유도, 의무적 휴경제도 폐지, 젊은 경영자에 대한 지원 증액 등이 골자다. EU는 정책의 단순화(policy simplification)와 검증(health check)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단순화와 정책검증으로 개혁 추진

EU는 1992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시작으로 1999년, 2003년, 그리고 2008년 개혁을 거치면서 직불제가 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직불제는 197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1985년 환경농업 직불제, 1992년 소득보상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가운데 품목별로 실시되던 소득보상 직불제는 2003년 경영단위의 단일직불제로 전환되었고, 성격도 '소득보상'에서 다원적 기능이나 친환경을 유도하는 '직접지불'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개혁동향은 CAP의 제1축인 소득보상 직불금의 일부를 농촌개발로 전환하거나, 제1축 그 자체를 이행조건 강화나 다원적 기능 중시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화를 확산해 왔다.

또한 세계 곡물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의무적인 휴경제도를 폐지하였다. 휴경제도는 1980년대 말부터 자주적으로 실시되었고, 의무적인 휴경은 1992년 개혁부터 적용되었다. 초기에는 휴경률이 15%이었으나 1999년 10%로 인하되었다. 바이오연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채 등 연료용 작물재배는 허용되었다. 최근 긴박한 세계 곡물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잠정 정지상태였던 의무적 휴경제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직불금 수급과 연계하여 '이행조건' (cross compliance)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농가는 환경보전이나 공중위생, 동식물위생, 동물복지 등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생산활동과 농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해야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지불된다. 직불금과 이행조건을 교차(cross)시킴으로써 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제고한다는 의도이다. 이행조건 중 생산자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적은 조항은 삭제하고 수질관리와 같은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고 있다.

이번 농업각료이사회에서 결정된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생산규모에 따른 직접지불에서 품질이나 친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지불로 전환한 것이다. 2009~2012년까지 직불금을 5% 감축하는 등 보조금 감축동향을 보면 향후 직불제의 방

향을 전망할 수 있다. 직접지불의 조건인 의무적인 휴경제도는 완전 폐지하여 생산의 자율성을 높였고, 젊은 경영인에 대한 지원과 투자확대를 도모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에는 EU 예산의 약 40%를 전체 인구의 3%인 농업생산자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종전의 소득보상 직불금은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10% 감축되는 셈이다. 이로써 EU는 소비자의 비판을 피하면서 보조금의 용도를 소득정책에서 농촌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고, 또 DDA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 셈이다.


특히 이번 개혁에서 획기적인 점은 생산량과 직불금을 연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곧 농산물의 품질이나 환경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불함으로써 고품질과 친환경을 유도한다는 의지이다.

직불제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다. 지불하한(0.3ha)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농가를 제외하는 문제나 영국 왕실이나 구 동독의 집단농장과 같은 대규모 경영에 대해 지불상한을 설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직불제에 대해 새로운 논의도 있다. 직불금 수급근거는 농지나 생산량에 있는데,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를 농업적 또는 환경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것은 직불이 농지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직불을 농지와 분리하고 미래의 수급권을 증권화(bond scheme)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 직불금 수급권의 증권화 논의

즉 직접지불 기간을 한정하여 일정기간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권을 공채 형태로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농가는 공채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매각하여 경영확대에 투자하거나 농외 전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지에 연계된 직접지불이 가지는 문제, 즉 지가 상승이나 직불금의 지주 이전과 같은 왜곡은 피할 수 있다. 행정업무가 간소화되고 행정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직불금 수급에서 자유로워진 비효율적인 농가가 생산에서 탈퇴하게 되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효과도 있다.

EU는 가맹국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구조나 생산조건 차이 등으로 개혁의 스피드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단순화와 정책검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농업정책에서 다원적 기능의 중시로, 그리고 고품질·친환경 생산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EU의 직접지불제는 진화하고 있다. 

# 11월 농정 주요 동향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 제시

정부는 10월 7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10월 21일 94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의 5대 국정지표 하에 지표별로 4개 세부전략 및 관련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중 38개 세부실천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섬기는 정부' 부문에서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을 반영하였으며, 식품안전 강화 과제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신발전시대 전환 등 농촌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농업관련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안전 강화 세부과제 관련 실천과제는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수입쇠고기 국내유통경로 추적체계 정비, 우수농산물관리제 확대 등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한다.

'활기찬 시장경제'는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세부과제로 포함하고 있어 농업·농촌 부문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 이외에도 토지이용 규제 완화, 물가 안정, 녹색성장, 새만금 관련 사업 등이 중요 과제로 전망된다. 주요 세부실천과제로는 '돈 버는 농림수산업' 관련 16개 과제와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민지원 확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지전용·소유 및 거래규제 완화, 새만금 관련 과제 등이 있다.

'능동적 복지'에서는 농어업인 생활 지원 및 경영안정을 핵심 과제로 시행하고,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이 주요 세부과제이다. '성숙한 세계국가'에서는 FTA 체결 대상 국가 다변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농업·농촌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 및 농지 이용 관련 정책 추진 동향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는 (가칭)「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토지은행 제도를 제정·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제도는 토지은행이 개발예정지나 가능지를 매입 또는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수급관리의 성격을 보인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중 농림수산식품부와는 토지은행의 농지 취득 허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토지은행 사업과 중

복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은행과 토지은행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0월 30일 회의에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 측면의 규제 개선, 토지공급능력 확대, 토지이용절차 소요기간 단축 등이었다. 이 중 농지이용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경자유전 원칙 범위 내 한계농지 소유·거래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 소유규제 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올해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인 농지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농지 지정 의무 폐지,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 폐지 등이 있다.

## 농식품 수출 및 정책 동향

농식품 수출액 규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2008년 10월까지의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수출 추이를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평균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가공식품의 비중이 신선농산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심의 수출 구조가 점진적인 다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2005년 상반기 46.5%에서 2008년 상반기 32.6%로 감소한 반면, 러시아·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27.5%에서 35.0%로 증가하였다.

수출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국제 곡가 및 유가의 급등은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였으나, 하반기 원자재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환율은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약만두 파동, 중국 유제품 멜라민 사태 등으로 인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를 증가시켰다. 일본 등 특정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는 점도 앞으로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수출 목표를 기존 41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홍보·판촉 확대,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30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50개의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고, 동일품목 선도조직을 통합하여 마케팅 보드화를 유도하는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 추진 계획도 수립·추진하고 있다.

(동향분석실)

# 영국의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전략

김 병 료 연구위원

##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전략 제시

영국의 농업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식품산업까지 포함하면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인다. 2007년 영국의 경지면적은 목초지를 제외하면 440만ha이며, 포함하면 1,736만ha로 넓은 편이다. 농업부문 생산액이 36조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을 보면 토지생산성은 훨씬 낮은 편이다.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3조원에 달해 수입의존도가 우리나라처럼 높다.

한편 식품산업부문까지 포함한 농식품 전체의 부가가치는 약 177.6조원으로 전체 경제의 6.9%를 점하고, 고용인원이 365만 명이나 되어 전산업 비중이 13.8%에 달한다. 그 외에도 농식품 부문은 산업에너지 소비량의 14%, 수자원 소비량과 폐기물 배출량의 10%, 대형차량 수송거리의 25%, 이산화탄소 배출량 700만톤 등을 차지하여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국가적 어젠다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국 정부도 2005년 3월에 발간한 국가전략 「Securing the future」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로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대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영국 환경·식품·농촌개발부는 2006년에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영국 내 농식품 산업의 위치를 고려하여 핵심 영역과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다.

## 푸드마일은 농식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동거리의 총합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켜 사회 후생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해 수송 거리가 크게 늘어나면 수송비용과 혼잡비용이 상승하고 교통사고와 소음공해도 증가한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 외에도 농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식품안전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계측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푸드마일(food miles)'은 농식품이 생산-가공-도소매-소비자 단계에서 이동하는 거리의 총합을 의미한다. 농식품 수입이나 국내 유통거리가 늘어나면 식품 마일리지 증가하고, 이는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로컬푸드운동에 폭넓은 국민지지

영국정부의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전략'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 과정에서 수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여 2020년까지 사용량을 10~15% 줄이기로 하였다. 둘째, 수송부문을 개선하여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2012년까지 20%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차량 개선, 소비지에서 생산지까지 되돌아가는 공차회송(back-hauling) 등 하드웨어적인 수단과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이동거리 최적화, 재고관리를 통한 수송빈도 최적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송부문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최대 4.8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포장지침 도입, 재활용 증진,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등으로 2010년까지 농식품 부문의 폐기물 배출량을 15~20% 저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산 농식품 소비 증대와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식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연료에 대해 리터당 20펜스의 감세 조치를 실시하고, '수송용 재생연료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동시에 환경부하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다른 하나의 움직임은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이다. 환경·식품·농촌개발부,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의 중요한 목적은 식품 마일을 감소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영국 소비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2006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로컬푸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80%,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응답이 88%, 지역 생산자·농업인에게 기여한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다.

## 영국의 푸드마일리지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유럽연합의 상호준수의무나 미국의 2008 식품·보전·에너지법 등의 사례는 농식품부문에 반영해야 할 또 하나의 기능과 의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 전략'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한 농식품'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쟁력 외에도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와 성과 역시 '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한 영국의 정책적 대응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R]

# “전남 동부권 식품산업 발전 방향 모색” 순천대학교와 11월 27일 공동 심포지엄 개최



순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전남 동부권 식품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순천대학교와 공동으로 11월 27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전남 동부권 식품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전남 동부권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에 활기를 불어 넣는 자리가 되길 당부했다.

이어 순천대학교 장만채 총장의 축사가 있는 후 우리 연구원 임상규 고문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임 고문은 “지역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순천대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대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구원의 이용선 식품정책연구센터장은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 센터장은 “클러스터가 발전·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상호간에 교류가 활발해야 하고, 정보의 불완전성 및 정보격차 해소, 기술하부구조와 산업체 요구와의 불일치 해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순천대학교 김병무 교수는 ‘농식품 유통정책과 지역 농식품산업의 전략’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SWOT(강점·약점·기회·위협)분석을 통해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은 ‘순천농협의 농식품가공사업 추진 사례’ 발표에서 식품클러스터 추진을 제시했다.

순천대학교 성치남 누리사업단장의 사회로 열린 종합토론에는 순천시청 국승영 보건위생과 계장, 전통우리음식진흥회 김영희 회장, 화순군청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 순천대학교 신길만 교수, 우리 연구원의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 ARPC 자매마을과 교류 추진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농촌마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1월 4일 자매결연을 맺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2리 마을을 방문했다.

김정호 소장은 센터에서 마련한 마을발전기금을 김규천 이장에게 전달했다. 센터 직원들은 자매결연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과와 고추따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 2008 벤처농업전문아카데미 개최

우리 연구원 벤처농기업보육센터는 11월 14일 구례군 농협연수원에서 2008 벤처

농업전문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 조명기 연구위원의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와 산지유통 개선사례’, 김태곤 연구위원의 ‘자원 위기 시대의 일본 농촌 활성화 사례’, 한겨레초록마을 박병권 이사의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사례’ 등 6건의 강의가 있었다.

우리 연구원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인 한국푸드웰(주) 공장 준공식이 11월 7일 청도읍 월곡리 청도농공단지에서 있었다. 푸드웰은 새로운 전처리와 건조방식을 도입한 농산물건조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에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 연구진 동정

△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11월 21일 정해걸 국회의원이 주최한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11월 12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농업분야 남북교역 및 투자협력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송주호 연구위원은 11월 5일~7일까지 대만에서 ‘글로벌 농업자유화와 농정개혁’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김태곤 연구위원은 11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본농업연구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의 직접지불제 비교’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연구원 경영 전략과 발전 방향 모색”



주요 보직자 및 선임연구자 연찬회를 11월 14일과 15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 주요 보직자 및 선임연구자 연찬회를 11월 14일과 15일 베어스타운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영 여건 변화 속에서 연구원의 발전 전략과 경영혁신 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첫날 박성재 부

원장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어 옥치목 행정실장이 ‘주요 인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고, 심금섭 총무인사팀장은 ‘청사 지방이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최지현 선임연구

위원은 ‘연구원 조직 및 인력분야의 당면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워크숍을 마친 뒤 오세익 원장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연구원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향후 3년간 경영목표에 반영할 계획이다.